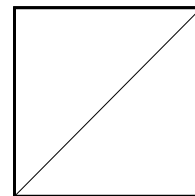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1. 27. (제 2 차)	

(주)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1. 27.

## 1. 의결주문

(주)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 2. 제안이유

(주)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여신거래시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 등) 제1항 및 제3항
- (舊)「은행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9호
-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 제1항 제4호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32차 제재심의위원회(2020.12.17.) 심의필

<별지>

(주)하나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 기관에 대한 조치

- (주)하나은행 : 과태료 1,8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제3항

(舊)「은행법」 제69조 제1항 제9호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4호 제31조, [별표4]

## 2. 조치사유

### 가.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

- ☐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담보제공 범위내로 연대보증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주)하나은행(AAAA지점)은 2017.12.29. 차주 (주)BBBBBBBBBBB에게 대출금액  
합계 9천만원 기취급 여신(1건)을 기한연장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관 계 법 규

### □ 「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① 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3.~4. (생략)
-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⑤ (생략)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생략)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8. (생략)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 10.~11. (생략)
- ②~③ (생략)
- ④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5. (생략)
6. 삭제 <2017.4.18.>
- 7.~8. (생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①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 (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3. (생략)
-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5.~7. (생략)
- ②~④ (생략)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처. 은행이 법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9호	3,000

□ (舊)「은행법 시행령」(2020.1.1. 대통령령 제3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①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 (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3. (생략)
-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5.~7. (생략)
- ②~④ (생략)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 ③ (생략)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가. 가중 사유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5. 과태료 부과 면제

-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 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 할 수 있다.

③ (생략)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 붙임 2 >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주)하나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2.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800만원 부과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

□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담보제공 범위내로 연대보증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주)하나은행(♥♥♥지점)은 2017.12.29. 차주 (주)○○○○○○○○에게 대출 금액 합계 9천만원 기취급 여신(1건)을 기한연장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의2
2.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일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76	02-3145-7062